

한·EU FTA 체결에 따른 축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정부는 지난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EU FTA 체결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분야 경쟁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기본방향은 품목별로 축산 선진국과의 경쟁력 차이를 분석, 관세감축에 의한 가격차를 축사시설현대화, 질병근절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품질·위생 수준 제고 등을 통해 극복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가공산업 활성화, 가공원료유 지원, 학교급식 및 수출 확대 등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적정생산기반을 유지할 계획이다. 경쟁력 제고 방안에도 불구하고 수입 증가 피해가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보상금을 지원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돈산업 발전대책은 첫째, 생산성 향상, 친환경 축산 활성화 등으로 국내 소비기반을 구축하며, 둘째, 질병 근절 및 우수 종돈 공급, 분뇨처리시설 확충, 등급판정제도 개선, 가공산업 활성화 등에 주력한다. 낙농산업 발전대책은 첫째, 신규 수요 창출,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적정생산기반을 유지하며, 둘째, 가공원료유 지원,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한 유가공산업 활성화, 학교우유급식 확대 등 수급안정에 중점을 둔다. 양계산업 발전대책은 첫째, 질병근절, 사양관리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도계장 위생수준 제고를 통한 닭고기 수출을 확대하고, 난계대전염병 근절 및 대형닭 생산을 통한 생산비 절감, 수출확대를 위한 도계장 위생수준 제고에 중점을 둔다. 한우우산업 발전대책은 첫째, 생산비·유통비 절감 등으로 시장 점유율 55%를 유지하고, 한우농가 조직화, 암소개량 신규추진, 육우고기 품질향상 및 전문브랜드 육성 등을 통한 수요 창출에 중점을

둔다. 그 밖에 생산자 조직, 소비자 유통업체와 연계, 도축·가공·검사·배송·판매·수출을 일관적으로 처리하여 유통단계 축소 및 비용을 절감한다. 마지막으로 세계 지원 및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출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닭·오리 고기 전면 포장유통 실시 등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농림수산물식품부는 닭고기 등의 포장유통, 도축검사 담당자의 업무량 개선, 축산물판매업의 세부 영업신설, 위생교육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현재는 닭·오리 도축량이 하루 5만수 이상인 도축업 영업자에게만 적용되는 포장유통의무가 2011년 1월부터는 닭·오리 도축업 사업자 전체와 도축된 닭·오리 고기를 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에게까지 전면 확대 실시된다. 특히, 위생관리상 통제 없이 유통 판매되어 온 식용란(계란)에 대하여 2011년 4월부터는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해야만 유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닭·오리 도축검사 담당자의 기존 업무량을 연차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검사 여건을 강화하여 축산물이 보다 안전하게 생산·공급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도축업, 가공업 등 영업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였고, 원격교육(인터넷 교육)도 가능토록 하여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높아진 위생관리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여 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영업자의 위생관리와 관리기관의 안전관리 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생명산업 2020+발전전략

농림수산식품부는 12월 6일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명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생명산업 2020+발전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분야 중 발전 가능성이 높은 종자, 기능성·의약소재, 동물의약품, 미생물, 바이오에너지, 애완·관상동식물 산업의 6대 분야를 중점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명산업 발전전략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다.

다양한 농림수산 생명자원 확보 및 유전적 특성을 평가하여 신품종육종, 기능성물질 등 생명공학 등의 생명산업 소재로 제공할 계획이다. 농업분야 생명자원을 현재 21만 점(세계 6위)에서 2020년에 34만 점(세계 5위)으로 확대하고, 13%에 머무르고 있는 특성평가비율을 2020년에 8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별, 분야별로 관리되는 생명자원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DB)을 구축하여 올해부터 2013년까지 60억 원을 투자, 자원정보검색부터 분야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R&D)을 개편하여 천연의학 소재, 품종육종 및 바이오에너지 등 생명산업 분야에 확대 지원한다. '농림기술개발사업'을 '생명산업기술개발' 사업으로 개편·확대하고, '농생명원천기술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생명산업 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활성화 및 지역의 농림수산 특화사업을 활용한 생명산업을 육성한다. 생명산업 기업체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농식품 모태펀드를 최대한 활용하고, 첨단시설 및 장비 등이 집적된 민간육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약용작물을 이용한 천연색소 산업화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기능성식음료·의약·화장품 등 개발 및 생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진청, 국가 농작물병해충 관리시스템 구축 가동

- 돌발병해충 발생 예찰·예측·진단
One-Stop 서비스 -

농촌진흥청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해 농업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농작물 병해충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국가 병해충 관리시스템' (이하 'NPMS', <http://npms.rda.go.kr>)을 구축해 오는 24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NPMS : National Pest Management System

이 시스템은 지금까지 국립농업과학원 등 농촌진흥청 소속기관별로 별도 운영해 오던 벼 병해충 예찰정보시스템, 과수종합정보시스템, 농작물 생육상황시스템, 농작물 병·해충·잡초정보 등 4개의 전산시스템을 통합하고 병해충 작목을 확대하여 새롭게 구축한 것이다.

과거에는 벼의 병해충 발생 정보만 수집했던 것을 벼, 사과, 배, 포도, 감귤, 단감, 고추, 콩, 맥류 등 9개 작물로 주요 돌발병해충의 대상범위를 확대시켰다. 또한, 주산지에서 예찰한 병해충 발생 정보를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등록하고, 전국의 병해충 발생과 그에 따른 제반 상황을 웹 지도상에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했다.

이로써 농촌진흥청은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발생 예찰에서부터 예측, 진단까지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울대 박은우 교수 연구팀과 협력해 개발한 벼, 사과, 배, 감귤, 고추의 30종 병해충 예측모형을 국가농림기상센터에서 제공하는 960m 격자단위의 기상정보를 기반으로 병해충 발생 예측정보를 일 혹은 시간 단위로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현했다.

이를 통해 농장단위로 병해충 예측 모형을 참고하여 실시간으로 방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정보

를 제공해줄 수 있게 되었고, 농업인들은 농업기술 센터에 의뢰하게 되면 내 농장의 병해충 예측정보와 그에 따른 방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 병해충 관리시스템’을 통해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이미지를 검색해 누구나 쉽게 진단할 수 있고, 진단결과에 대한 발생 생태 및 방제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

전국 농촌진흥기관의 병해충 전문가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전문가 진단 시스템을 구축해 새로운 병해충 발생 시 보다 정확한 조기 진단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추후 병해충 정보를 유관기관 시스템과 정보연계를 통해 국가적으로 농작물 병해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은 “앞으로 병해충 발생에 대한 조기진단과 방제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농가피해를 더욱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 아·태지역의 이동성 병해충을 총괄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해 국가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농촌진흥청〉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입쇠고기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위생적으로 안전한 수입쇠고기를 공급하고, 정확한 이력정보를 제공하고자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하위법령을 개정, 2010년 12월 22일부터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시행되는 법령의 주요내용은 수입유통식별표 부착, 거래내역 신고, 수입유통이력정보 공개 등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주요골자로 한다.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유통·판매용으로 수입되는 모든 쇠

고기는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포함한 식별표를 부착해야 하며 식별표가 부착되지 않은 수입쇠고기는 국내 유통할 수 없도록 하였다. 둘째, 거래내역신고 의무대상 영업자 등을 정하여 거래내역을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제출(수입이력관리시스템 등록)하게 하여 위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 등 처리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셋째, 수입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 중 수입유통식별번호, 원산지, 유통기한, 수출국 도축·가공장(일), 수출회사, 수입회사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넷째,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에 필요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권한 일부를 수입검역 전문기관인 수의과학검역원에 위임하고 통관부터 국내유통·판매까지 유통경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위해(危害)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가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였다.

농식품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위생 및 안전문제 발생 시 신속한 회수,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 등이 방지되고 판매되는 수입쇠고기에 대한 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현장 감시 활동 및 영업자 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